

# 한동훈 지도부 붕괴... '쇄신 없는 결속'에 민심 이탈 가속화

탄핵 후폭풍 속 친윤 결집만 남아 비상계엄 찬성과 '부역자' 낙인 논란 비대위 논의 속 쇄신없는 안정 추구 영남 자민련 비판, '전국 정당' 위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민심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어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의 사퇴로 16일 한동훈 지도부는 막을 내렸다. 탄핵안 가결의 여파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친윤계가 한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부역자' 운운하며 압박한 결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한 결과(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시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73.6%)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한다(69.5%)고 응답했으나, 정작 탄핵 공개 찬성을 요구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꼴이 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택했으나, 대다수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봤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사퇴한 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선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이 세가지는 잘 이룰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

서 개선하고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세평에 오르고 있다.

중진 사이에선 이 모든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제가 그런 말을 했다. 일부에서 부역자란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계엄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 잘 해야 한다.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계엄을 막은 사람이 배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자들만 믿고 위협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호호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싸워줄 국민이 누구인가"라며 "일부 극우 세력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말 궤멸 위기에 처한

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친윤계 의원이 민주당 부역자(탄핵 찬성파)를 덮어주고 90명끼리 똘똘 뭉치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지금 우리는 전국 당이 아니다.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분들(탄핵 반대파)께서 전국적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것이 관심인지,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들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저변을 넓히거나 중간층을 끌어들이어서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똘똘 뭉쳐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어깨동무하고 가자는 입장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력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임박... "박근혜 사례 준용해 곧 발표"

특검법 추진, 내란·김건희 특검 압박 정국 수습 본격화, 대정부 질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추진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명, 야당이었던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고 이것에 준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반특검법은 내일(17일)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래야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간, 정부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이란 이름으로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입법과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수 회복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등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수 활성화, AI 지원, 전력공급망 인프라 지원"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60가지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정리돼 있다고 한다. 예산 협상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과제는 민생경제회복단 중심으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실무적으로 오는 23~24일에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하자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지도부 교체로 구체적인 일정 확정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의총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언대에 서서 이번 계엄이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2·12 사태 때도 서울부터 장악하고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었다"라며 "전 국가 차원에서 행정권, 사법권 장악의도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구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을 뒤서 군정 통치를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 尹 대통령, 내란혐의 출석 요구 거부... 강제수사 가능성 커진다

공조본, 18일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검찰 긴급체포·체포영장 가능성 확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 남용 혐의로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그 어디에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용산 대통령실 전달 실패. /뉴스시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며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불발됐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업무소관이 아니냐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출석 통보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조본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이날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들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거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원승일 기자 won@